

# “우리 땅 넘어오지 마”...성남 버스 통과도 못한다는 서울시

### 위례신도시 500m 구간 못 지나가 1500m 도는 마을버스 지난해 12월 상생협력 행정협 출범 불구 문제 해결 안돼

“서울시 구간은 500m라도 통과할 수 없다.”  
서울시가 시 경계를 넘어온다는 이유로 마을버스의 500m 무정차 통과를 허용해 주지 않아 성남시 위례지구 주민들이 1500m를 돌고 돌아가는 불편을 겪고 있다.  
위례지구는 서울시 송파구, 경기 성남·

하남시에 걸쳐 있는 신도시다.  
생활권이 같지만 도로 등 공공시설은 행정구역에 따라 이들 3개 자치단체에 분산돼 얽혀 있다.  
때문에 주민들이 다양한 형태의 불편을 겪고 있고 관계 지자체인 서울시, 서울시 송파구, 경기도, 경기도 성남시, 하남시는 문제 해결을 위한 상생협력 행정협의회를

지난해 12월 출범시켰다.  
하지만 서울시가 성남시 마을버스 통과를 허용하지 않으면서 성남시에서 불만 소리가 나오고 있다.  
12일 경기도와 성남시 등에 따르면 성남시는 지난달 23일 협의회 출범식과 함께 열린 1차 회의에서 북정역 환승센터와 위례스타필드를 오가는 마을버스 21번 노선의 성남대로(송파대로) 서울시 구간 500m의 무정차 통과를 요청했다.  
당시 성남시는 “북정역은 위례신도시 성남시민들의 가장 근거리 거점이고 서울 송파차고지와 성남대로(송파대로)를 운행하는 서울 인가 버스 노선이 다수 있다”며

“분당선·8호선 환승거점인 북정역의 버스노선 확충은 필수 불가결하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하지만 서울시는 “다수의 일반형 시내버스 운행구간에 마을버스의 진입은 원칙적으로 불가하다. 일반형 시내버스를 이용한 접근성 개선 방안을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허용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성남시 주민들은 동일한 정차 구간을 가는데도 500m를 통과하지 못해 1500m를 돌아야 하는 불편을 겪고 있다.  
서울시는 앞서 지난해 7월 경기도의 21번 마을버스의 노선변경 요청에도 극심한

교통체증, 마을버스의 기·종점을 단일 행정구역 내로 정하고 있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등을 이유로 거부했다.  
성남시 관계자는 “8호선 추가역사, 위례~신사 철도, 위례 트램 등 철도수단의 광역교통대책과 내부 연계 외부 도로가 지연되고 있어 위례신도시는 자가용 이외에 노선버스가 유일한 교통수단”이라며 “노선버스 민원이 현재도 집중되고 있다. 인접한 북정역과 장지역으로 연결되는 버스노선을 확충해야 다른 교통수단이나 서울 버스노선과 환승체계가 구축된다”고 말했다.

뉴스1

## 대구 도심 한복판에 ‘박근혜 생가터’ 표지판 3년만에 재등장 뒤늦게 알려져



13일 대구 중구 삼덕동 박근혜 전 대통령 생가터(현 쇼핑물 건물) 옆에 ‘제18대 박근혜 대통령 생가터’라고 적힌 표지판이 재설치돼 있다. 최초 박 전 대통령 생가터에 설치된 표지판은 지난 2013년 2월25일 중구청이 박 대통령의 취임을 기념해 설치했다. 당시 박 대통령이 꽃다발을 들고 손을 흔드는 모습이였다. 그러나 2016년 11월18일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에 불만을 품은 50대 남성이 붉은색 스프레이를 뿌리는 등 훼손돼 철거됐다. 한 시민단체의 지속적인 재설치 요구를 중구청이 받아들여 2019년 10월 다시 세워진 것으로 알려졌다.

‘탄핵 정국’ 당시 훼손돼 철거됐던 박근혜 전 대통령 생가터 표지판이 대구 도심 한복판에 다시 설치된 것이 뒤늦게 알려졌다.  
13일 대구 중구에 따르면 표지판이 설치된 곳은 동성로 쇼핑물 거리의 교통표지판 기둥이다.  
표지판에는 ‘제18대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 생가터(Site of Birthplace of 18th president Park Geunhye)’라고 적혀 있다.  
알루미늄 재질에 가로 20cm, 세로

60cm 크기의 이 표지판은 중구청이 20여만원의 예산을 들여 지난해 10월 설치했다.  
중구 관계자는 “보수단체가 표지판을 다시 설치해 달라는 민원을 받고 구청 앞에서 집회를 열어 민원 해소 차원에서 설치한 것”이라며 “정치적 의도나 다른 뜻은 전혀 없다”고 말했다.  
박 전 대통령 생가터 표지판에는 곡절이 있다.  
대구 도심 한복판에 박 전 대통령 생가터를 알리는 표지판이 처음 설치된 것

동성로 쇼핑물 거리에 재설치  
“보수단체가 민원·집회 열어”  
“정치적 의도나 다른 뜻 없어”

은 2013년 2월로, 당시 대통령 당선 후 취임을 기념해 대구 중구가 표지판을 세웠다.  
하지만 3년여가 흐른 2016년 11월 최순실 등에 의한 국정농단 사태가 발생하자 분노한 일부 시민이 표지판에 붉은색 스프레이를 칠해 훼손했고, 흉물로 변하자 구청이 바로 철거했다.  
2013년 설치된 표지판은 가로 70cm·세로 240cm 크기로, 박 전 대통령이 꽃다발을 들고 웃으며 손을 흔드는 사진과 생가터 이력을 소개하는 글이 적혀 있었다.

뉴스1



포항사랑상품권 인기 2020년 새해 경북 포항사랑상품권 8% 할인 판매 첫 날인 13일 오전 상품권을 구입하기 나온 시민들이 북구 양덕동 농협 포항지점 앞에서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다. 포항사랑상품권은 기업형슈퍼(SSM), 유흥업소 등을 제외한 모든 업소에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다.

## 서울시, ‘자가용 소형 태양광’도 보조금... ‘민간 태양광’ 활성화

올해부터 발전사업용뿐 아니라 개인이나 민간이 ‘자가용 소형 태양광’ 발전시설을 통해 전력을 생산하는 경우에도 서울시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서울시가 소형 태양광 발전사업자의 문턱을 낮추고 지원은 대폭 확대하는 내용으로 ‘서울형 햇빛발전 지원제도’를 손질, 2020년 1월1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서울형 햇빛발전 지원제도는 설비용량 100kW 이하인 소형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운영하는 발전사업자에게 생산 발전량만큼 지원금(1kWh 당 100원, 5년 간)을 주는 제도다. 2012년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의무 할당방식 도입 이후 가격 경쟁력이 떨어지는 소규모 발전사업자의 어려움을 지원하기 위해 2013년 서울시가 전국 최초로 도입했다.  
올해 새로워지는 제도는 ‘민간의 자발적 참여 확대’에 방점이 찍혔다. 서울시는 대규모 부지 발전소 설치가 어려운 도심지 특성과 소규모 전력중개시장 신설, 자가용 전기설비도 전력거래가 가능해지는 등 국내 발전사업의 여건 변화를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이를 위해 우선 당초 10MW까지 지원하기로 계획됐던 누적설비용량을 20MW까지 2배로 늘려 참여의 문을 확대한다. (‘19

년 말 기준 누적설비용량 8.5MW)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대상도 기존 발전사업자 외에 자가용 발전시설까지 확대된다. 소규모전력중개시장, 상계거래, PPA 등에 등록하는 자가용 시설 가운데 설비용량 100kW 이하인 소규모 발전시설이 해당된다. 민간 역시 재생에너지 생산자로서 에너지 전환에 기여하고 있는 만큼 민간 태양광 설치자에 대한 지원을 시작하는 것.  
민간이 민간건물에 설치하는 경우 생산 발전량에 1.2 가중치를 적용한다. 고층빌딩이 많은 도심지 특성상 음영, 민원발생 등으로 인해 상대적으로 태양광 설치·운영이 어려운 실정을 고려했다.

# 부풀리고 조작된 가짜뉴스는 사라져야 합니다

가짜뉴스가 사회를 혼란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자극적이거나 의심스러운 뉴스는  
공신력있는 기관을 통해 한번 더 검증해보는 현명함으로  
가짜뉴스를 근절시켜 정직하고 바른사회를 만들어 갑시다.



한국언론진흥재단  
Korea Press Foundation